

##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머지않아 2000년 대회년의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로 얼룩져 참담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의로운 노동자와 학생, 청년, 교수들을 차디찬 감옥으로 내몰았던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무관심했던 사제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지난날 우리는 "신앙의 영감을 받은 삶을 세상에 증언하기는커녕, 참으로 반증거와 추문의 행태를 보이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에 빠져들어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났던..."(제삼천년기, 33항)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오와 불충한 사례들에 대한 회개와 쇄신이 없이는 새로운 천년기를 열어가는 2000년 대회년의 여정에 동반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의사표현 및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도구로 쓰여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은 억압과 인권침해의 사슬을 끊는 기로이며 출발점입니다.

### 1.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당 안에서 또 야당에서 '개정불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사실에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한때는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였고 인권대통령이라고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김대중대통령이 인간존엄성과 공동선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으로 머무르려는 것에 안타까움과 더불어 분노를 금할 길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당의 한 축인 자민련과 야당은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익을 떠나 무엇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인지 '국가보안법 개정불가'의 입장이 양심과 도의에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 2. 양심수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과거 정권들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정권유지의 한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이란 낡은 칼을 휘둘렀던 것처럼 현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지난해 초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전체 국보법 위반 구속자 65명 가운데 3항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자가 335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법원이 이들에게 실형을 내린 것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 동안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현정부의 북한과의 개방화 교류의 확대로 국가보안법의 주요규정이 사문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3. 우리는 또한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합니다.

2000년 대회년은 회개와 쇄신을 통해 사회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와 일치를 위해 투신하는 구원과 은총의 해입니다. 2000년 대회년이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앙금과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고 불신과 억압의 장벽을 허무는 신앙인 각자의 노력이 요청됩니다. 이제 반세기동안 분단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수히 자의적으로 악용되어왔던 국가보안법은 이 땅의 평화통일과 2000년 대회년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므로 폐지되어

야 합니다. 사회정의와 자유, 평화와 일치의 실현을 거부하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회년의 참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 시초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의 우열이 이미 드러난 이상,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간곡한 심정으로 다짐하고 호소합니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부분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철폐되는 그날까지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정의로운 행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이 전원 석방될까지 양심수와 그 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남북간의 화해와 일치,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분단조국의 하나됨을 위해 평화 통일의 제단에 자신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과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귀 기울이는 목자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옹호하며 증진시키는 교회의 모습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 사회의 지도층과 위정자들, 가진 사람들에게 인간존엄성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1999년 11월 5일 · 5일간의 시국미사를 마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연대

### □연대서명

#### 최덕기 주교

김대영 김봉기 김승만 김연관 김유신 김윤중 김일우 김진범 김창해 김형수 김형중 김황식 나경환 노희철 류종구 문상운 민영기 박경훈 박전동 방상복 배영무 배용우 서복원 서종선 서종업 손창현 송영오 안병선 양영진 양형권 오유성 우종민 윤민서 윤용배 이강건 이근복 이동춘 이상돈 이상용 이상선 이상현 이영우 이용기 이인석 이정혁 이호권 임유택 장기영 장동주 장명원 전창훈 정광해 정연혁 정영철 정종득 정현호 조규식 조한영 지철현 차재훈 최경남 최병용 최병조 최석렬 최재철 최중환 최중혁 최진혁 한승주 한연흠 한태문 현재봉 신부 (이상 1차 서명자 가나다순)



##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위하여

### - 국가보안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오는 12월 1일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민들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누르고 침해해 온 대표적인 악법임을 부정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칼날 아래 희생당해 왔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끝자락에 선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완전폐지나 대폭개정을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1999년 내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소수 기득권층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지를 묵살한 채 정략과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민회의는 개정 방침을 확정하고 개정시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볼 때 실제 대폭 개정이나 폐지의사가 없어 보이며,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의 경우 아직도 국가보안법의 존속없이는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는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니 이번 15대 국회회기내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고사하고 대폭 개정이나마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의 양심에 따라 이땅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구원을 억압해 온 그동안의 죄악과 구태를 단절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회년의 정신은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기 전에 해묵은 과거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우리 역사의 상처와 억압, 그리고 분열의 중심에는 바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다가올 21세기 역시 국가보안법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제라도 모든 사심을 버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의 존속은 그 자체로 죄악입니다. 대회년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세기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노래하기 전에 묵은 허물과 구태를 과감히 도려내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거듭 천명하는 바입니다.

1999. 11. 29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1. 우리는 오늘 세계 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이 땅에서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후배와 후손들에게 참으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거나 빼앗기지 않는 세상을 미리 보여주고, 물려주기 위하여 인권문화제를 열었습니다.

2.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담아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을 지니고 자신의 삶을 가꾸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서로 협동하며 하느님의 창조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삶, 보다 아름답고 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삶을 우리는 고유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3. 이 아름다운 세상에 처음으로 '소유'가 들어오고, 오직 '나 만의 것'을 고집하고 '나의 것'을 늘리기 위하여 '너의 것'에 욕심을 갖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세상은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은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서로의 삶을 간섭하고 제한하고 빼앗으며, '나의 것'을 늘리고 지키고 나누지 않는 모습을 자신의 고유한 삶으로 여기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다른 이를 억압하는 근거로 삼아 왔습니다.

4. 참된 인권보장이란, '너'를 '또 다른 나'로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보장을 위해 경쟁하고 다투어야 할 대상이나 적이 아닌, 더 낮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함께 노력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지켜주는 가운데서 서로의 고유한 영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즉, '너'의 삶을 인정해 주어야 '나의 삶'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같이.

5. 이 즈음에서 우리는 똑 같이 51주년을 맞는 반인권의 상징인, 폐륜아 국가보안법을 봅니다. 똑 같은 연륜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군림해온 이 법도 아닌 악법을 우리는 얼얼한 가운데 난 종양처럼 50년을 넘게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거짓증언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고문하며 죽이기가 지 하였습니다.

6.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법도, 하느님께서 보장하신 사람들의 고유한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악법'이 아니라 '악' 그 자체로 규정합니다. '악'은 '악' 자체일 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미화하거나 포장할 수 없습니다. '선'의 대립개념으로서의 '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7.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큰형님과 같은 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반대해 온 사람들, '악'과 타협하고 악의 씨앗을 남기려고 하는 개정론자들 이들 모두를 우리는 '악'의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섬겨야 마땅한 국민들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우매한 것들로 여겼던 민중의 손에 의해 그 악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8. 세계인권선언 51년과 국가보안법 철폐노력 51년을 기억하며 우리는 아직도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세상의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예뻐 외면하는 이들에게 요구하고 경고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개정하거나 대체할 것이 아니라 완전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개정이나 대체의 논의도 거부하며, 오직 완전 철폐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마지막까지 당신들과 맞설 것입니다.

1999년 12월 6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부산교구 천주교연대



〈정기국회 폐회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새천년도 국가보안법을 끌고가려 하는가?**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창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는나?”(루가 12.56)

이번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조차 상정되지 않음으로써 결국 20세기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 해지고 말았습니다. 새천년을 국가보안법과 함께 맞아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안타까움과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며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자라고 강변하던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폐의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국가보안법 폐폐에 대한 진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을 그대로 남겨놓은 함양미달의 개정안으로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폐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려고 했으나, 그나마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집권여당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본류를 자처하는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폐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구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회의의 최소한의 개정안에도 '결사반대'의 깃대를 울리고 있으니 결국 희망과 인권의 새시대가 되어야 할 새천년에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반공이데올로기의 유물을 그대로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들의 단한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사회의 진보를 가로막고 인권을 유린해 온 대표적인 악법임을 천명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의 새천년을 열기 위하여 신앙인의 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어느때보다도 남북간의 화해의 기운이 드높았으며 반민주, 반인권 악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지난 11월 4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조약)'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이 남북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재차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한 것은, 우리사회의 민주화 진척 정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여전히 인권후진국으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대내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저질폭로전과 총선에서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정략과 정쟁으로 수많은 민생·인권법안의 처리를 미뤄둔 채 정기국회 회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와 개혁은 껌데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인권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위선과 기만에 다름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교회정신에 입각하여 다시한번 국가보안법이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임을 천명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민주와 인권의 새천년을 거부하는 정치인들과 냉전수구세력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면서 2천년전 예수의 말을 빌어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창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는나?"(루가 12.56)라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새천년에도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

대하여 시국기도회 개최 등 가능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평화와 인권을 바라는 국민들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거니와 정치인들은 이제부터라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1999년 12월 1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이완영 수녀 문국주 대표











## 국가보안법은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존엄성을 중시하는 사회는  
법과 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는 사회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며 법과 질서를 준수하라는 정치인들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법과 질서를 얘기하지만 뉴스와 신문문을 채우는 기사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비리와 부패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제도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인간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인권을 억압하고 극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과 제도는 이제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 과연 국가보안법이 무엇인가에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잡아 가두던 치안유지법이 그 모태이고, 제정 이후 50년이 넘도록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선량한 시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개혁과 통일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고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을 앞당기고자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는 길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 국제사회의 웃음거리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라는 것은 유엔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엔 인권규약 위반이라며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권고에 귀를 막고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스스로 웃음거리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인권대중행으로 남고 싶다는 김대중 대통령을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중포구 동순동 50-17 천정연 복음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 은총의 대희년 운동 - 국가보안법으로부터의 해방

## 인간존엄성 훼손의 주범, 국가보안법은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톨릭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은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세 1:26-27) 그리고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창세 9:6)는 말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지음 받은 인간에 대한 그 깊은 경탄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교라고도 합니다.

### 하느님의 법은 자비롭고 엄정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하느님나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과 탐욕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의 권위와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 이웃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인간 발전에 본질적인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현존을 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보다 더 고귀한 특권과 의무는 있을 수 없습니다.



### 대희년을 향한 우리의 투신

바야흐로 신앙인들은 2000년 대희년의 은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대희년은 회개와 재신을 통해 사회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화와 일치성을 위해 투신하는 구원과 은총의 해입니다. 희년의 기쁨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억압의 장벽을 걷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정의와 평화의 편에 서고자 할 때 하느님의 질서가 세상에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회정의와 자유, 평화와 일치의 실현을 거부하고 억압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해방과 구원의 속재인 대희년의 활정신을 이 땅에 뿌리 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인간존엄성을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충분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어떠한 법적 제도도 장차도 거부합니다.





# 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신안법의 안습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 국가보안법이 폐지될수록 국가안보는 이상 무
- 국가보안법은 안보를 핑계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
- 천주교 내 33개 단체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

■ 일시 : 1999년 9월 15일(수) 오후 2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영 대 변호사 (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li> <li>○ 안 종우 변호사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br/>않다) 대 울 회 교+ (한국 공리회)</li> <li>○ 김재현 변호사 (당파)<br/>없다) 최 영 모 변호사</li> <li>○ 신영진 변호사 (국가보안법<br/>없다) 김 영 교+ (사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 영 순 변호사 (국가보안법<br/>유 선 호 정한 세력가 국보법)대<br/>대 사 실 정원 (한국공리회)</li> <li>○ 오 영 호 김명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가)</li> <li>○ 최 영 호 김명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인)</li> </ul> |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0-510/A 서울특별시 중부구 통술동 10-1 신영진 회관 2층  
TEL: (02) 342-2448, FAX: (02) 342-2447

국가 보위안 천주교 연대

## South Korea의 인권을 위해 식발단식농성을 하신 신부님들께 보내는 연대 편지

신부님들께,

South Korea의 인권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부님들의 단식농성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인 South Korea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3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인권은 종교와 인종 그리고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의 양심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 용감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신부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해온 South Korea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사를 이미 밝혔으며 또한 South Korea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South Korea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을 South Korea정부가 자국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마땅히 받아들일 것을 또 다시 촉구합니다.

우리는 South Korea를 포함한 전 세계의 인권 향상을 위해 반인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들! 비록 단식중인 신부님들 바로 곁에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신부님들의 투쟁이 이역만 리 떨어진 이 곳에까지 그 파장을 미쳤다는 것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단체들은 신부님들의 활동에 고무받아 South Korea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님들과 함께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식 후 몸조리 잘 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1999년 9월 30일

멀리 북미주와 호주에서 인권과 정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

- Asian Pacific Center for Justice & Peace (정의와 평화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센터)
- Committee In Solidarity with Peoples of El Salvador (엘살바도르 민중연대위원회)
- Derechos Human Rights, California (데레초스 인권위원회)
- Guatemalan Human Rights Commission (과테말라 인권위원회)
- Maryknoll Justice and Peace, New York (정의와 평화를 위한 메리놀 사제단)
- Minnesota Advocates for Human Rights (미네소타 인권옹호회)
- Pax Christi USA (팩스 크리스티 미주본부)
- Robert F Kennedy Memorial Center for Human Rights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 Torture Abolition & Survivors Support Committee (고문근절과 피해자 지원위원회)



United Methodist Church, USA (연합 감리교단 미주본부)

Young Koreans United of Canada (재가한국청년연합)

Young Koreans United of USA (재미한국청년연합)

Filipino Australia Union Link (호주 필리핀 노동조합연대)

Korean Resource Centre in Australia (시드니 민족 교육 문화원)

Search Foundation (조사 재단 - 호주)

South Korean Human Rights Action in Australia (한국인권운동 호주본부)

Young Koreans United of Australia (재호한국청년연합)

## 국가보안법 폐지 없는 인권대통령은 허구이다.

김대중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개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민회의가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김영삼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보법 전면 폐지와는 거리가 먼 부분개정과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국보법을 폐지하기는커녕 그중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고 유엔이 유엔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제7조 조차도 부분개정에 그치려고 하고 있다. 특히 7조 중 가장 독소조항인 제 3항(이적단체 구성, 가입)은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의 이 같은 기본적인 국보법 부분개정 움직임에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보법의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국보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침해물 야기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국보법의 폐해는 단순히 일부 독소조항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의 본질적 성격 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둘째, 국보법은 남북통일의 동반자요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북한을 항구적인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간첩행위 등 국보법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행위들은 이미 형법에서 충분히 중한 형으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법이 존립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국보법은 설혹 북한에 유사한 법제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핑계로 그 존치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악법이다. 우선 북한은 이미 우리의 경쟁상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경쟁상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악법 경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냉전시기에 소련에는 인권억압의 법적 장치가 많았지만, 미국은 '악법 경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역사의 승자가 누구였던가는 잘 알려져 있다.

넷째, 국보법의 존치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국제적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존립할 이유도 없으며, 존립해서도 안 되는 악법을 기본적인 부분개정을 통해 존치시키려 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반정부세력을 탄압해 온 독재정권들의 작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국보법의 미온적인 개정방침이 수구세력들의 반발을 고려한 현실적 타협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변명이 되지 못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양대 국정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고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저명한 인권상들도 수상하였다. 그러나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사실 인권대통령과 거리가 멀고, 인권대통령을 자임하지도 않았던 김영삼 전대통령도 이 정도의 개정은 했다. 아니, 소위 '인권대통령' 하에서 김영삼 정부 시절의 무려 4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국보법으로 구속되었다. 김대중정부가 진정한 '인권정부'라면 기본적인 국보법 개정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폐지에 나서야 한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더욱 문제가 많다. 자민련이 자임하듯이 진정한 보수세력이라면, 국민회의의 미온적인 개정움직임마저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 즉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자신들이 주장하는 '뉴 밀레니엄 리더십'이라는 것이 50년대의 냉전시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국보법 폐지의 대오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새 천년을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과 함께 시작할 수는 없기에, 우리들은 국보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999년 11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전국 교수 일동



## 국가보안법 피해자 선언문

분단과 독재의 암흑천지에서 애국민중들의 피눈물을 먹고 독버섯처럼 자라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 기나긴 세월동안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국민들이 이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위정자들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민족의 혈맥을 두 동강내고, 부모 자식간의 천륜마저 유린하며, 빨갱이라는 말 한마디로 수많은 애국자들을 평생 보안관찰 대상으로 감시하고, 무지막지한 연행과 고문을 자행했다. 북을 동족이라 했다고 빨갱이 친북 세력이 되었으며,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를 외치면 이적단체, 좌경용공분자로 둔갑되어 감옥으로 끌려가야 했다. 지난 50년 세월동안 우리 민중들에게 국가보안법은 공포의 대상이자 원한의 표적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분단과 독재의 얼어붙은 땅에서도 민주와 통일의 새봄을 향한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이 제정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 애국 민중들은 단 한번도 이 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 속에서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단과 독재에 기생하는 집권자들과 수구기득권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무시하고 정권안보와 사리사욕을 위해 개악과 기만적 개정만을 되풀이해 왔다.

이제 바야흐로 애국민중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의 새시대가 열리고 있다. 냉전 해체로 이념의 벽이 무너지고 남북교류로 민족대단결의 기운이 상승하여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된지 오래다. 수많은 피해사례들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유엔인권위, 국제사면위 등 많은 국제단체들도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구시대 악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마저도 이북과의 관계개선과 제재해제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김대중 정부와 부패한 정치권만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겠다고 개정과 대체입법을 운운하고 있다. 개정과 대체입법의 기만적인 말장난 속에서 군부독재, 문민독재를 능가하는 광폭한 탄압이 저질러지고 있다. 이 개탄스런 현실 앞에서 30여명의 신부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삭발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를 계기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수많은 민족민주 운동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삭발, 단식, 농성, 집회 등 다양하고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국가보안법의 희생자인 우리들이 이 투쟁의 최선두에 설 것을 결의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시키기 위해 결연히 일어서고자 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철폐의 의지를 모아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반통일, 반민주, 반인륜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라!

개정, 대체입법을 운운하는 것은 사멸해 가는 국가보안법의 진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만극이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주와 통일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완전 철폐되어야 한다.

### 2. 김대중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3. 김대중 정부는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고, 정치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 4. 한나라당, 자민련의 일부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비이성적 색깔공세를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국민적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하라!

우리의 이러한 운동은 한번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결의를 모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유력한 주체로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행동 없는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말을 명심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의 그날까지 의연하게 우리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1999년 10월 일, 국가보안법 피해자 일동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사회단체 비상시국선언문

국가보안법이라는 회대의 괴물이 탄생하여 통일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들을 옥죄고 억누르기 시작한지 벌써 반세기가 넘었다. 분단과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민족적 실천에 대한 도구가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었다. 억압과 독재의 시대를 넘어 민주와 평등의 시대를 개척하려는 민중적 행동에 대한 권력의 억압도구가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었으며, 1948년 제정되어 반세기를 넘긴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민중들의 피눈물과 고통의 역사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새로운 세기와 새로운 천년을 앞둔 1999년, 희망과 장미빛 미래를 선동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민중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이 개선되며, 새로운 복지와 발전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권력의 속삭임과 현란한 수사에 현혹된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돌이킬수 없는 민주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민중들의 삶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기쁨이 아니라 분노였다. 김대중 정권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고, 범민련, 한총련 등 민족민주 세력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광폭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등 연이은 공안사건을 통해 다시금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의 행동과 목소리는 반민족 반통일악법, 반민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갈가리 찢겨지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국제인권단체들과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해왔으며, 국내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여론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계인권선언 50돌을 기념해 김대중 대통령 등 정치인 100여명이 엠네스티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의 권유로 국제인권규약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했지만, 국보법은 사라지지 않고 민족의 양심들이 탄압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며, 헌법에 보장된 사상, 양심, 학문, 언론, 표현의 자유등 국민기본권을 유린하는 위헌 악법이다. 국제적으로도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협약등 국제법에 위배됨으로써 온 민족의 철폐요구와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도 수차례 폐지권고를 받고 있다. 우리사회의 민주개혁은 국가보안법 철폐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이 아니라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일각에서 7조 찬양고무, 10조 불고지죄만을 개정 또는 폐지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동족을 적으로 못박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반민족 반통일악법, 반민주 반인권악법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서는 위헌 상황을 종식시킬 수 없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준법시약제와 보안관찰법 폐지,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도 일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오직 한 줄도 안되는 권력집단과 보수세력들만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인권정부가 거둬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고 한다. 국가보안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하여 국내외의 비판여론을 비껴가려는 얄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극우보수세력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손을 대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몇조를 고치고 몇몇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전부인양 비취지는 정치권의 현실을 거부한다. 국가보안법은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적 폭력과 반민주적 법률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체제라면, 국민의 민주적 동의와 지지에 의해 뒷받침

되지 못하는 사회라면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사회이다. 다시한번 4천만 민중의 이름으로 정부당국에 온 거래의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염원을 받들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함으로써 분단공안통치를 끝내고 조국통일정국을 활짝 열어 희망찬 21세기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이제 들불이 타오르고 있다. 새로운 천년은 권력의 시대가 아닌 민중의 시대로 만들고자 하는 들불의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모진 탄압속에서도 수십여년간 끊이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이제 커다란 들불이 되고 있다. 순교자의 자세로 20여일이 넘게 단식농성을 전개한 천주교 사제들의 행동은 이미 작은 불씨가 되었다. 이제 종교의 벽을 넘어 지역과 계층의 틀을 깨고 우리사회의 모든 민주적인 노동, 사회, 종교단체 그리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들불을 지펴갈 것이다. 우리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다.

1999년 10월 14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사회단체 비상 시국대회 참가자 일동



## 전국사회단체시국회의선언문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T.755-4380 ~ 1 T. 741-5363

1999년 11월 30일 <공동성명서>

###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 “국가보안법 51년, 그 치욕의 역사를 이제는 지워야 한다”

1. 12월 1일로 반인권·반민주·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만 51년을 맞게 된다. 국가보안법 51년의 역사는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인권이 아닌 야만이 지배하는 시간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어떤 변화와 개혁이 있었다고 그것은 결코 진정한 진보와 개혁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양심과 내면을 규제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진보운동과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거짓 민주주의이며, 개혁이란 위선일 뿐이다.

2.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지난 51년동안 철저하게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지배도구로 활용되어왔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제거하는 수단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으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원칙을 부정하고 파괴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한때 우리는 암울했던 군사정권시절을 마감하면서 국가보안법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문민정부를 거쳐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양심수가 대통령이 되는 시기에 더 이상 국가보안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철저하게 배반당했다. 김대중정부 1년동안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가 과거 군사정부와 김영삼정부 시절보다 3, 4배를 웃돌았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탄압받았던 야당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은 회대의 악법이었고, 자신들이 집권한 지금은 국가안보를 위해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대중정부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모습이다.

3. 우리는 최근 국민회의가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양심과 사상,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핵심조항이었고, 90%가 넘는 절대다수의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처벌받았던 조항인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등)을 유지시키면서 기타 조항을 부분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과 반민주성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유엔조약도 지난 11월 1일 인권이사회회의 공식결의를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우리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수구반동적 주장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조선일보라는 극우보수집단의 여론조사에서도 80%에 이르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의지도,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냉전집단, 공안세력을 대변하는 집단에 다름아닌 것이다.

4.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51년이 넘게 존재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부정된 시간이 51년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그 어둠의 역사를 지워야만 한다.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 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 (가칭)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

임시연락처:

전화.741-5363/전송.741-5364/E-메일.rights@chollian.net/통신.rights(천.하).인권사랑(나우)

연락담당자: 서준식 (011-343-5363), 김정희 (019-338-7409)

수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발신: (가칭)‘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 (연락담당 서준식)

제목: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날짜: 1999년 9월 10일

먼저 귀 연대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체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답변서에 우리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느라 이렇게 늦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서면은 귀 연대의 공식적 질의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담은 뿐,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귀 연대 정책부서와 우리 연대가 직접 만날 기회를 가지고 이 서면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1. (가칭)‘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의 기본 구상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담스러워 침묵하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광범한 ‘개정’론자들이 나름의 주장과 수위로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있어 이런 ‘중간부분’의 동원이 분명 큰 관건 중 하나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동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술적 배려가 너무도 부족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운동이 광범위한 대중으로부터 고립되는 경향마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원칙적인 개정론은 언제나 국가보안법의 소폭 개정에 기여했으며 이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대는 최소한의 가입조건을 ‘7조 삭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국가보안법에 있어 7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대가 귀 연대나 혹은 이른바 강한 NL성향을 바탕으로 통일운동과 견고하게 결부시키는 방식의 반 국가보안법운동과는 성격을 달리함을 자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연대의 특수한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여타 반 국가보안법운동의 가치에 대하여 부정하거나 적대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운동은 각각의 미덕을 가지고 병행되어야 하며 (‘한목소리’가 아닌) 여러 가지 목소리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 해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기왕에 각종 연대기구에 소속되어 반 국가보안법 활동을 하는 그 어떤 단체에도 우리 연대의 가입을 권한 바가 없습니다.

2. 우리 연대가 구상과정에서 귀 연대에 대하여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일종의 절차적 실수라고 인정합니다. 물론 양해를 구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범 NL’을 대표하는 전국연합에는 직접 찾아가 핵심 인사 두 분과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운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양해를 한 바 있었습니다.

천주교연대로 찾아가지 못한 것은 전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정된 인력으로 우리 연대의 결성을 준비하다 보니 추진일정에 계속 차질이 생겨 실행을 못했을 뿐입니다. 항상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 있었으며, 결국 8월 31일에 서준식이 천주교연대로 전화를 해서 김경호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광한왕 집행위원장은 인천에서 활동하시는 관계로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시간이 맞지 않아 충분한 대화를 갖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연대 구상 초기(3월)부터 각종 반 국가보안법 연대간의 공식테이블을 마련하는 일은 상호간의 공식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나 분명히 필요한 상호간의 조율은 각 연대의 핵심적 인사들이 개인적인 만남을 정례화 시키면서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대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는 이런 비공식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3. 우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준비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문건을 여러 차례 수정해왔습니다. 귀 연대가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 초안의 해당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항상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였으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심층에까지 내려가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였다. 수구세력들이 끝까지 남기고 싶어하는 조항이 바로 7조이며, UN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7조이며, 국가보안법 구속자 중 약 93%가 7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한다면 우리의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은 막연한 "철폐!"가 아니라 7조 폐지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7조 폐지에 방점을 두지 않는 반 국가보안법 운동은 진정 국가보안법에 반대할 의사가 박약한 운동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짧은 글씨체 부분은 공식발표된 문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우리의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은 7조 폐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7조 폐지에 방점을 두지 않는 반 국가보안법 운동은 진정 국가보안법에 반대할 의사가 박약한 운동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수정부분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수정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신문 '활보'에 그대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실수에 대해서 실무를 감독하는 서준식이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진정 국가보안법에 반대할 의사가 박약한 운동" 운운에 대해서는 우리 연대 내부 회의에서 그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으로 사과를 드리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대외적으로 발표될 문건에서는 이 밑줄 부분에 대한 수정이 가해진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귀 연대에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연대의 입장과 운동방식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근본적 인식에 귀 연대와 우리 연대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서로의 철폐전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임을 이해해주시고 우리의 입장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7조에 正照準하지 않는 운동, 막연히 "철폐"를 주장하지만 하는 운동은 국가보안법의 수많은 문제점을 같은 비율로 제기하는 운동이며 따라서 논점을 핵심부분에 집중시키지 못하고 국가보안법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기가 어려운 허술한 운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귀 연대와 건설적인 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4. 국민으로부터 고립되지 않은 운동, 낮은 의식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끌어올려주려는 운동, 분열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방향으로부터 국가보안법을 공격하는 운동을 지향하는 우리 연대의 진의를 최대한의 선의로 해석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 연대의 발전과 분투를 빕니다.

1999년 9월 10일  
(가칭)'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준비모임  
책임집필 : 서준식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원주.횡성지역 연대회의' 결성선언문

## - 반통일 악법,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

오늘 우리는 분열과 대립의 한세기를 마감하고 화합과 공존, 평화와 일치의 시대 2000년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은 온 인류에게 희망과 기쁨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모두에게 보나온 삶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는 전쟁과 개발의 상처, 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우리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한국사회는 전쟁과 분단의 상처로 얼룩진 시기였습니다. 분단된 한국사회는 독재의 그늘아래서 반인권과 비민주화, 불균형한 자본주의 경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던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죽어갔으며, 부패한 정치권력과 재벌들의 결합으로 인해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국민들은 희생되어 왔습니다. 이런 억압과 탄압의 역사 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에 독립군을 잡아 가두던 치안유지법이 모태가 되어 제정 이후 50년이 넘도록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선량한 시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걸이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것입니다. 인간의 의사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런 인간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국가보안법은 반인권적인 악법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고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은 화합과 공존 그리고 평화와 일치의 새 천년을 맞이하는 지금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인들은 일부개성이나 폐지반대를 주장하며 국민의 의사회는 상관없는 당리당락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지역의 양심있는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원주지역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반통일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999년 10월 29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원주.횡성지역 연대회의



# 1999년 활동평가서

★이 평가서는 각 참가단체의 단체별 평가서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재정리한 것입니다★

## 1. 평가에 들어가며

99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의 결성은 대회년의 정신을 사회속에서 실현한다는 목표와 의의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또한 천주교연대는 교회의 새지체인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조직적인 틀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일을 추진하여 가며 교회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내고자 했습니다. 교회내의 많은 단체가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렇듯 조직적 연대의 틀을 형성해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커다란 성과이며, 우리의 활동 또한 99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불씨가 되어 각계각층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가 들불처럼 타오르는데 기여한 바 적지않습니다.

99년 우리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단체별 평가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충실한 평가를 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2000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기초와 전망을 세우고자 합니다.

## 2. 평가

### ■전체 평가

1) 짧은 시간안에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준비가 부족하여 실제 내용만큼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지만(특히 홍보 활동의 미흡), 1999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의 결성은 각계각층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광범위한 연대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되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수 있다. '99년 연대운동의 경험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사회복음과 더불어 교회운동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우리의 소

중한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우리운동의 집중력과 정치력의 한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있어왔지만 아직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전문역량의 부족, 기존 운동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나 연구가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등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당장 드러나는 성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천주교연대의 결성이 가지는 의미를 성공적으로 평가하여 치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단일사안으로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유례없이 광범위한 단체가 참가했고 각 지역을 망라했으며, 중앙에만 한정된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연대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하는 실질적이고 결속력이 있는 연대활동이 이루어졌기에 천주교계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의미를 한차원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제도권 교회활동가들과 여타의 교회활동가들의 교류 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교회내 다른 단체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으며 교회운동의 전망을 새롭게 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형식면에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내용적인 면에서 결합력이 떨어지는 단체들이 존재하고 일부 지도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이는 우리의 한계일수도 있지만 연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건강한 연대성과 적극적인 사회복음화 활동들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3)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추진하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각기 자신이 지닌 고유함을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운동을 풍성하게 해주었으며 기존의 명망가, 성직자 중심의 교회운동을 한차원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 새지체가 내용적으로 진정한 연대성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명확하게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선을 불러일으킨적도 있었지만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사업별 평가

#### 1. 서명운동

1) 경과 - 각 지역별, 단체별로 서명운동 전개, 순례단 서명운동, 농성단 서명운동  
2) 서명현황 - 광주 11,954명 청주 7,066명 안동 333명, 부산 7,447명 서울 4,158명 마산 3,197명 인천 8,305명 수원 651명 제주 512명 대전 577명 원주 2,227명 춘천 492명 대구 7,434명 농성장 1,005 한국여자수도회장 상연합회 2,447명 순례단 7,317명 전가대행 909명

서명집계 : 66,090명

3) 11월 2일 제단체 서명결과와 함께 3만 2천여명 국회에 폐지입법 청원 (소개의원 : 이미경 의원)

#### ▶ 평가

전국 모든 교구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었으며 교회내 신자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알려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대부분 공문을 통해 본당 자체적으로 서명이 진행되었는데 추진하는 단체에서 선전, 홍보작업을 병행하면 더 많은 서명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교구별로 추진주체가 있는 교구와 그렇지 못한 교구의 서명인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최소한 교구별 책임자는 선정되어야 한다.



## 2. 2000인 선언

### 1) 사업경과

#### - 선언인 집계

사제단 : 60명 인권위 : 60명 천정연(우신연, 농민회 포함) : 280명 인천교구 : 609명(광고계62명) 원주교구 : 71명 부산교구 : 255명 청주교구 : 119명 안동교구 : 119명 광주대교구 : 642명 전주교구 : 40명 수녀장상연합회 : 241명

총계 : 성직자 (342) 수도자(493) 평신도(1170)

선언자 총계 성직자 - 375명 수도자 - 493명 평신도 - 1191명

선언자 총계와의오차 : 지도위원, 개별참가자

2)1999년 8월 2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발표 및 기자회견

3)광고 : 한겨레 신문 - 8월 26일자 하단 5단 통광고, 평화신문 - 8월 29일자 전면광고, 가톨릭신문 - 8월 29일자 하단 5단 통광고

### ▶ 평가

천주교내 적극적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하고 일반·교회언론에 홍보함으로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우리의 의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판구별로 2000인 선언을 조직하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우리 역량의 한계를 절감했고 2000인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 이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 3. 전국순회기도회

1)일정 : 1999년 8월 16일 - 9월 12일(28일간)

2)순례코스

서울-부평-인천-수원-안성-대소-광혜원-청주-대전-논산-강경-용안-함열-여산-천호-신대인-부안-정읍-익산-전주-군산-수류-광주-목포-부산-마산-창원-밀양-화원-대구-상주-안동-계천-원주-춘천-서울

### ▶ 평가

전국순회기도회에 자전거 순례를 접목시킨 것은 새로운 시도였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힘들게 진행되었지만 가장 홍보효과가 큰 사업이었다. 자전거순례가 가지는 상징적인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전거 전국순례를 조직하지 못한것에 대한(이를 반복한 집행위원장단 회의에 대한)문제제기가 있었으며, 특히 중앙순례단 구성에 있어 상징성있는 대표단이나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결함하지 못한점과 중앙순례단의 참여인원이 너무 적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자전거순례와 결합된 전국순회기도회가 지역언론에서는 크게 다뤄진데 반해 중앙언론의 관심이 적었으며 그만큼 언론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자전거순례를 통해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의 계기를 만들고 이후 국가보안법 사업을 함께 풀어나가는 효과를 거둔곳도 있으며, 책임지고 준비하는 주체가 없는 지역에서는 적지않은 부담으로 다가온곳도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짧은 시간안에 많은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준비가 충실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후 사업에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중앙순례단을 대규모로 조직하는 것과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 함께 하는 것이 요청되며 지역단체들의 절대적 결함 또한 중요하다.

## 4. 심포지엄

1)일시 : 9월 15일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주제 :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 발제자-이장희 교수, 최병모 변호사, 성영 교수

### ▶ 평가

많은 사람들이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정책적·논리적인 천주교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이성적 접근을 교회와 사회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심포지엄 속에서 범국민연대기구 구성에 대한 제안으로 이후 연대기구 결성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발제와 토론에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측이 참여하지 않아 심포지엄의 효과가 반감되었다. 이는 법무부, 한나라당, 자유총연맹 등 존속론자들의 참여거부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나 치밀한 사전준비로 이들을 참여시키지 못한 준비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다.

## 5. 단식기도, 지역별 시국미사

경과 : 9월 7일 사제단 단식 돌입, 9월 10일 단체별 지지단식 시작, 교구별 단식기도로 확산

- 매일8시 미사, 단식소식지, 하루소식 발행, 시국기도회 개최, 한겨레연속광고 게재

- 지역별로 매일시국미사, 월요시국미사, 수요시국미사, 금요캠페인 진행

### ▶ 평가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단식기도와 교구별로 진행된 단식기도는 그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오던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하나로 모아내는 데 기여했으며 제단체들과의 연대를 이루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단식기도중 사제단과 천주교연대의 관계설정 및 논의구조에 대한 문제와 천주교연대 내부 집행체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의 교회의 세지체가 함께 이끌어가는 운동이라는 실질적인 연대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구별로 진행된 단식기도와 시국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당위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국미사가 진행될수록 참여자의 수가 적어지는 문제는 신자들이 식상해지지 않는 다양한 진행방법을 요구하였다

## 6. 국회의원에 질의서 발송

경과 -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9월 18일, 10월 28일 2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 발송 : 17명 응답 폐지 - 6명 개정 - 5명 존속 - 6명

### ▶ 평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응답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이후 사업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2차에 걸쳐 질의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7명만이 응답함으로써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질의서를 보내기만 할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통해 답변을 계속하고 압박함으로써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인원의 한계로 이를 추진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원봉사자의 풍부한 활용이 요구된다.



# 보도자료



### 7. 홍보물 제작

경과 - 천주교연대의 사업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리플렛, 엽서, 유인물(각 58,000부), 스티커(10,000매), 소식지(40,000부)를 제작하여 각 참가단체별로 성당과 일반시민에게 배포.

#### ▶ 평가

홍보물의 내용이 단순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수 있었으나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대응하는 기민한 홍보물의 제작이 아쉬웠다.

#### ■재정 평가

전체 예산안(6,000만원)과 실제 재정(3,460만원)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비교적 합리적으로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단체별 분담금에 대해서는 단체별 능력과 실정에 맞게 무난하게 책정되었다 할 수 있겠고 대다수의 단체가 적극적으로 납부하였다. 다만 일부 단체에 있어 책정된 분담금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아쉬웠고, 몇몇 재정상태가 열악한 단체들에게는 단체분담금은 예외로 하더라도 자료분담금과 사업에 필요한 여타 재정소요가 많아 부담이 되기도 하였다. 재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분담금뿐만 아니라 고문이나 지도위원을 통한 후원금을 조직해 재정에 보탬을 주어야 할 것 같다.

#### ■집행위원회 평가

##### - 회의경과

대표자회의 - 2차, 연석회의 - 2차, 집행위원회 - 9차 기획위 : 5차 사업위 : 4차 조직위 : 2차

#### ▶ 평가

각 위원회(기획, 사업, 조직) 체계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고 3개의 위원회 체계를 두었으나 공동집행위원장 사이의 상시적인 회의체계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각 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집행위원회에서 총화되거나 위원회 체계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무국의 업무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각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집행위원은 회의와 업무의 하중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준비된 조건이 충실하지 못한 가운데 형식에 치우친 결과라고 생각되며 굳이 형식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3개 위원회의 일원화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회의주기는 짧은 기간에 여러사업을 진행했던 현실 때문에 2주에 한번이 적당하였다고 판단되며 집행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상 반드시 참가를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지역별 1인 씩은 꼭 참가해야 한다고 본다)



#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발신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수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님  
제목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대회 보도의뢰

- ▶행사명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대회
- ▶일 시 : 1999년 7월 12일 오후 7시
- ▶장 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취지

참언론을 일구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언론종사자 여러분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천주교 각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교회내 여러단체가 참여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가 결성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2000년을 앞두고 교회내적으로는 해방과 구원의 축제인 대회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의미를 가지며, 사회적으로는 수많은 인권탄압 시비를 불러오며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국가보안법의 실질적 폐지를 요구하는 실천적 의미가 있습니다.

## ◎행사안내

- 경과보고와 참가단체 소개
- 상임대표 인사
- 격려사
- 연대사
- 사업계획 발표
- 축하공연
- 선언문 낭독

## ◎사업계획안

- 1) 시명운동
- 2) 순회기도회 (자전거 순례와 결합)
-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교계 지도자 선언
- 4) 심포지엄(토론회)

- 5) 폐지입법 청원운동
- 6) 홍보물 제작(항의엽서, 리플렛 등)

## ◎함께 하시는 분들

고 문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나길모 주교, 유현석 변호사, 이돈명 변호사

지도위원  
김승훈 신부의 14개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상임대표  
김영진 신부, 문국주, 이영숙 수녀

공동대표  
이준형 신부의 참가단체 대표자 27인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참가단체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광주대교구노동사목/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부산교구공부방연합회/부산교구노동상담소/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서울대교구한마음한몸운동본부/(사)우리신학연구소/(사)푸른평화/인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울, 춘천, 원주, 청주, 대전, 광주, 전주, 안동, 부산, 마산, 제주교구대학생연합회)/전국가톨릭청년단체협의회(부산, 광주지역가톨릭청년연합회)/전국환경사제모임/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정의구현목포연합, 빛두레신앙인학교, 정의구현상주연합, 천주교여성공동체, 장기수가족후원회, 천주교청년공동체, 인천교구가톨릭청년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한국가톨릭농민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서울, 인천, 수원, 원주,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안동, 대구, 마산, 부산본부)(이상 가나다순)



# 보도요청서

수신 : 각 언론사  
참조 : 담당기자님  
내용 :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발표 및 기자회견  
발신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 참된 언론문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8월 25일 오후 2시30분 명동 가톨릭회관 3층 331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함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3. 2000인 선언은 한국천주교회에서 기념하는 2000년 대희년의 의미에 맞추어 전국 14개 교구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2000명이 신앙인의 양심에 비추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선언에 동참한 것입니다.
4. 2000인 선언 발표와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5.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천주교 2000인 선언문과 성명서를 보내드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영숙 수녀

# 보도요청서

수신 : 각 언론사  
참조 : 담당기자님  
내용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순회기도회, 순회기도회 출정식 보도요청  
발신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 참된 언론문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8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순회기도회'를 전국 각 교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 15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순회기도회 출정식'을 갖고 서울에서 출발하여 제주를 돌아 다시 서울까지 돌아오는 28일간의 일정이 잡혀 있으며 순회기도회 기간중에 교구 및 관구별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3. 8월 15일 출정식 장소는 8.15통일대회장소(경희대)로 출정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16일 상도동성당에서 문규현 신부 파북 10주년 기념미사를 시작으로 전국 순례일정이 시작됩니다.
4. 전국순회기도회가 광범위한 신자대중의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5. 전국순회기도회 사업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110-510/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TEL(02)747-2448, FAX(02)747-2447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영숙 수녀



# 보도요청서

수신 : 각 언론사  
참조 : 담당기자님  
내용 : 국가보안법 폐지를 미사, 심포지엄  
발신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  
일시 : 1999년 9월 15일 늦은 1시  
장소 : 한나라당사 앞 유가협 농성장  
집전 :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단식사제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  
일시 : 1999년 9월 15일 늦은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 참된 언론문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9월 15일 오후 1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와 9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는 현재 명동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집전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은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하에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있어 다양한 입장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와 심포지엄에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5. 심포지엄 계획안을 보내드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TEL(02)747-2448, FAX(02)747-2447  
상임대표 : 김영진 신부, 문국주 대표, 이완영 수녀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

●일시 : 1999년 9월 15일 오후 1시 ●장소 : 한나라당사 앞 유가협 농성장  
●집전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단식사제 공동집전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

"국가보안법 이대로 좋은가?"

●일시 : 1999년 9월 15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사회 : 김형태 변호사(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

♣1주제 : 현 정세속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의미

발제자 : 이장희 교수(한국 외국어대)

♣2주제 :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발제자 : 최병모 변호사

♣3주제 :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 국가보안법

발제자 : 성 엄 교수(서강대)

♣토론자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유선호 의원(국민회의)

이사철 의원(한나라당) - 변경 가능

권오현 공동의장(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행동연대)

곽한왕 집행위원장(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일정

9월 15일 2:00 -2:30 주최측 인사, 참가단체, 내빈소개 등

2:30 -3:30 각 주제별 20분씩 발표

3:30 -3:40 휴식

3:40 -4:40 주제토론

4:40 -5:40 질의 및 응답 토론





# 신문자료

## '인권하루소식'

◆ 인권운동사랑방 ◆

1999년 12월 11일 토요일 제1516호

발행인: 서준식

하이텔, 천리안 ID: rights 나우누리 ID: 인권사랑

http://www.sarangbang.or.kr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기사제보: 741-5363 전송: 741-5364

###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끝내 한나라당은 인권의 적이길 자처했다.

한나라당은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보안법 관련 특별세미나에서 "국보법이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국보법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법 관련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른 뒤 한나라당이 '당의 입장'이란 표현 하에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정창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돌연 참석을 거부했다. 정 의장은 대신 '국보법 개정논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을 통해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편한 국민들보다는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다"며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에게는 다름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의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반하는 무력적화통일은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에도 우리의 국보법에 준하는 형법이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밝혔다.

#### '반국가단체·불고지죄' 개·폐 반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반국가단체(2조) 개념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우리 헌법 제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한'이라고 규정하는 한 북한은 당연히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교류의 확대도 발생하는 관계변화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불고지죄(10조)와 관련해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들이밀며 불고지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7조(찬양·고무)에 대해 한나라당은 7조의 남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작용 때문에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다"며 "목적성·위험성·이적성 등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용과 해석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는 있다"는 선에서 7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보법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인권유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당론이 유엔인권이사회에 권고안(편집자 주-국보법의 단계적 폐지, 7조의 즉각 개정)과 차이가 없다"며 "유엔인권이사회에 권고안에 따라 국보법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 주장과 관련해 조시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8년 전부터 일관되게 국보법은 명백한 자유권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식의 소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 보안법 폐지 천주교 연대 준비위원회 결성

### 광주대교구 정평위 등 교회내 21개 단체 참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히려 인권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시비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여론이 교회 내에서부터 번지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문규현 신부)을 비롯한 광주대교구·부산교구·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국환경사제모임 등 교회내 21개 단체는 6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혜화동 정의구현사제단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 연대」 준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각 단체 대표와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주정평위 위원장 김영진 신부 등을 상임대표로, 정의구현사제단 이영우 신부, 인천교구 정평위 최한왕 총무, 천정연 노진민 집행위원장 등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천주교 연대 준비위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7월 12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 연대」 결성대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결성대회를 시작으로 7, 8월 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을 모아 9월부터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국보법 폐지운동 등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PP. 94 (서상덕 기자) sang@catholictimes.org

## 보안법 폐지 천주교 연대 준비위원회 결성

### 광주대교구 정평위 등 교회내 21개 단체 참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오히려 인권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시비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여론이 교회 내에서부터 번지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문규현 신부)을 비롯한 광주대교구·부산교구·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국환경사제모임 등 교회내 21개 단체는 6월 24일 오후 3시 서울 혜화동 정의구현사제단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 연대」 준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각 단체 대표와 집행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원주정평위 위원장 김영진 신부 등을 상임대표로, 정의구현사제단 이영우 신부, 인천교구 정평위 최한왕 총무, 천정연 노진민 집행위원장 등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천주교 연대 준비위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7월 12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 연대」 결성대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결성대회를 시작으로 7, 8월 중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을 모아 9월부터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국보법 폐지운동 등에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상덕 기자〉

sang@catholictimes.org



1999년 7월 19일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연대 결성**

“국가보안법, 의 전변폐지를 주장하는 교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서울대학교 천주학생동맹운동본부, 서울대학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전국환경사제모임, 공주대학교 외 8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운동교총회 33개 단체는 7월 12일 오후 7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상임대표=7부) 결성대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기로 했다.

**천주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본격화**

교위 성직자·30여개 단체 연대 결성...범국민운동 전개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천주교연대 결성... 범국민운동 전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대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천주교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대교구 본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서울대학교 천주학생동맹운동본부, 서울대학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전국환경사제모임, 공주대학교 외 8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운동교총회 33개 단체가 참가했다.

천주교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대교구 본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결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서울대학교 천주학생동맹운동본부, 서울대학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전국환경사제모임, 공주대학교 외 8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운동교총회 33개 단체가 참가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공동대표와 지도위원 등 20여명이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대전 대동성소년교육원에서 국보법 관련 워크숍을 갖고 있다. [대전=김윤정 열매기자]

**보안법 대토론회 9월15일 개최**

천주교 연대, 8월15일부터 폐지 서명운동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틀간 대전시 성남동 대동성소년교육원에서 제3차 집행위원회 및 워크숍을 갖고 천주교연대가 2000인 대회인 결산의 구체적 실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당면 과제가 대해 집중 토론했다.

이런 워크숍에서는 서울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관련된 정세 인식과 통일전망, 박승현(민변 국가보안법 연구위원)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서 교수는 “현정부의 대북 정책·협력 정책의 성과 여부를 단기간 남북대화 상사에서 찾으려는 성급한 자세는 불식되어야 한다”며 “특히 남북한이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북한 제재를

부정하는 법률, 즉 국가보안법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북 정책의 일관성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연대는 워크숍에 앞서 제3차 집행위원회를 갖고, △국보법 관련 대토론회(9월15일·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순회기도회 및 자전거 순례(8월15일~9월12일) △국보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8월15일부터 2주간) 등 중점사업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집행위원회와 워크숍에는 국보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조직위원장 이영우(서울대학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신부들 비롯해 기획위원장 박현왕(인천교구 정명위 총무)씨, 사업위원장 노진만(천주교 장기수우의 총무)씨 등 31개 단체 공동대표와 지도위원, 집행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대전=김윤정 열매기자]

**천주교2095명 “보안법 즉각 폐지”**

**“양심·표현 자유 침해심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공동대표 김영진 신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본단의 역사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국민의 사상과 양심을 유희하게 통제하는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은 인간의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는 천주교 성직자 375명,

수도자 493명, 평신도 1191명 등 모두 2095명이 참여했다. 김태경 기자

**진행구씨 보석**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용 부장판사)는 25일 조재광사 파업 유도 사건으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풀려났다. 재판부는 “중형 범죄 등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다룰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변론할 기회를 필요로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기업의 회사채 1조7천억여원을 어지름 밀집에 산 뒤 허가 없

이 제2금융권에 비싸게 팔아 차액 53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40)씨의 보석 신청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오철우 기자

**경마장 전광판 사업자**

**마사회, 경쟁입찰 재선정**

속보=한국마사회는 과천·제주 경마장의 전광판 사업자 선정과정 보도(〈한겨레〉 24일치 15면)와 관련해 사업자 선정을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우 마사회장은 25일 “지금까지 추진된 선정과정을 전면 취소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보안법 폐지 천주교 2000인 선언**

성직자 375·수도자 493·평신도 1191명 서명

한나라당 의원 63명으로 구성된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대표 김용갑)이 지난달 18일 “국가보안법 폐지 발상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연 부정하는 행위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데 대해, 천주교계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한 보안법의 “폐지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

대는 이날 오후 가톨릭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제에 관한 논란 속에서 잊을만 하면 고질병처럼 다시 불거져 나오는 색깔론 시비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제적 공의의 요구를 경청한 수용, 회개하고 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 연대는 이에 앞서 발표한 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2000인 선언을 통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의사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임을 분명히 천명한다”며 “따라서 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 어떻게 해방과 구원의 축재인 대화년의 정신을 이 땅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인 선언에는 성직자 375명, 수도자 493명, 평신도 1191명이 서명했다. 교구별로는 서울 280명, 인천 62명, 광주 71명, 부산 255명, 창원 119명, 안동 119명, 광주 642명, 전주 40명이 서명했고 이외에 수녀장 상연담회에서 241명의 수도자들이 참여했다. [오세덕 기자]

함께 살린 생명밥상, 함께 웃는 도시 농촌





**보안법 철폐 자전거순례** \*부산교구 윤희동 신부(사진 맨 앞)를 비롯한 사제단과 청년 50여명이 2일 부산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자전거 순례'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자전거로 부산 진구 서면로터리를 왕복하며 거리에서 시민을 상대로 보안법 폐지 서명을 받았다. 이날 김현영 신부는 자전거 순례후 초항성당에서 봉헌된 미사에서 "보안법은 그동안 정권안보 수단과 공안비판을 불러일으키는 구실이 되어왔다"고 지적하며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부산=정종규 명예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전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문규현 신부 등 20여명의 사제들이 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전경선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삭발·단식기도**

**정의구현사제단, 성직자 29명 무기한 농성**  
전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삭발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대표 문규현(전주교구 서학동본당 주임)신부 등 성직자 29명은 이날 서울 명동 주교좌성당 성모동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전 이태원호기와 약탈에 의해 유지되는 안정과 질서는 성서의 말씀대로 '의 길은 무명'일 뿐"이라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이어 이날부터 전원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기도회를 갖고 있다. [오세영 기자]

**광주·전남천주교 "국보법 폐지" 한목소리**

**사제·신자를 3년만에 사회문제 발언**  
5-18 진상규명과 원전 반대 등 지역사회의 뜨거운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던 광주전남지역 천주교 사제·신자들이 오랜만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적극 나섰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준형 목포 북교동성당 신부)는 30-31일 광주와 목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기도회와 자전거순례를 펼친다. 80년 5-18 때 '강경 무력진압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던 윤공희 대주교의 유훈은 태도에서 보듯, 강한 사회참여 전통을 지닌 이 지역 천주교목이 이처럼 사회적 문제에 목소리를 낸 것은 3년 만이다. 80-90년대 지역사회의 아픔을 겪어낸 데 주저하지 않았던 천주교목은 94-95년 영광 원전 추가 건설 저지운동과 96년 고비에 이른 5-18 진상규명 촉구운동 이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지역에선 25일 발표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2000인 선언'에 608명이 참여했고, 국회 청원을 위한 서명에도 벌써 1만여명의 신자가 동참했다. 또 광주대교구 산하 성당 90곳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라고 쓴 현수막을 내거는 등 7월1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주교 연대' 출범 이후 활발히 뛰고 있다. [광주/이수범 기자]



**'보안법 폐지' 시국기도회**

**'전국 순례단' 해단 단식기도회는 계속**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순례단 단식기도회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문규현 신부와 전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문규현 신부는 9월 13일 오후 7시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개최했다. 시국기도회에 앞서 전국 14개 교구를 방방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 운동과 기도회 등을 펼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순례단'이 해단식을 가졌다. 해단식에서는 전국 순례단 대표와 순례기도회를 통해 만난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서를 제출했다. 전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열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미사'에서 김영진 신부는 강론을 통해 "50여년간 국민의 허리와 칼 다리를 묶어온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함께 고민할 진리"라고 강조하며 "2000인 선언의 민족의 진정한 기쁨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삭발단식기도회 각 교구로 확산**

**범종교인 대회도 열려**  
전주교를 비롯한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개 종단의 종교지도자와 신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종교인대회'가 9월 27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전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21일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기도회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주교연대,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단, 전국북교회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종교인협의회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한 마음을 모았다.

한편,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기쁨과 구원의 대희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120여개 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대회'를 결성 28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해 1만인 가두 서명 운동과 토론회 및 강연회, 국제연대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국보법 폐지 연대회의는 10월 2일 오후 2시 대현로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1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 국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마산교구** 정의구현사제단(교구대표 =남경철 신부)은 9월 14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여 평화와 자유, 인권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자"란 제하의 성명을 내고 삭발 단식기도에 돌입했다. 9월 20일부터는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단식기도회를 '월요 기도회'로 전환했다.

**전주교구** 11명의 사제들도 9월 16일 전주 중앙성당 레지오 마리아 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기도를 시작한 후 21일 가톨릭센터 2층으로 장소를 옮겨 단식 중이다. 한편 전주교구는 28일 오전 10시 전주 윤호관에 전체 사제들을 비상 소집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강의와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사제단도 9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다. 9월 20일 반송성당과 27일 전포성당의 기도회 개최에 이어 10월 4일 초량, 11일 복산, 18일 서면, 25일 반여성당에서 전가톨릭 기도회는 보안법 폐지를 위한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의 명동성당 단식·삭발 투쟁에 대한 부산교구 신부들의 동조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교회내에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안동교구** 소리모임(젊은 사제모임) 사제들은 9월 20일 봉화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단식기도회를 결의하고 9월 21일부터 8명의 사제가 무기한으로 단식기도회에 돌입했다. 9월 22일 오후 4시 북성동성당 교육관에서는 20여명의 사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기도회에 돌입하게된 이유를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교구** 15명의 사제들은 9월 28일 오전 11시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가난한 이들의 희망과 의지를 담아 9일 단식기도를 시작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단식 9일 기도회에 돌입했다. (최창우·오세영 기자 / 김성봉 마산지사장 / 이관영 전주지사장)















## 재벌개혁·보안법 소신 어디갔나

### 한나라 재야출신 '눈총'

재벌개혁과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 내 재야 출신인사들의 처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현미 국민의회의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이른바 '개혁세력' 들은 재벌개혁과 국가보안법 개정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며 "민주화 운동이 국회의원인 되기 위한 수단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매도당하는 것까지 묵인하면서 공안세력과 한 덩어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재야출신 의원들은 과거 자신들이 폐지를 주장했던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특별히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이부영 원내총무는 "여당과 (국보법 개정) 협상에 나서야 할 총무가 개인적 의견을 밝힌다는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유보하겠다"며 "그러나 국민의회의도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자민련은 이에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16일 총재단회의에서 국보법 개정 대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이우재 부총재쪽은 이날 "북한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으며,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의원쪽도 "노 코멘트"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이택 안재승 기자

## 보수 앞장 자민련 이동욱의원

### 보안법 개정 지지 '눈길'

자민련의 보수 이념가로 햇볕정책 비판에 앞장서 왔던 이동욱 의원이 국가보안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주목된다. 이 의원은 18일 열린 당 안보특별위원회에서 "국보법의 몇 개 조항의 오남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보안법의 추상적인 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제7조를 들었다. 처벌기준이 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천양고무'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불교지죄를 규정한 제10조의 경우 천축의 범위는 직계가족으로 명시하고 처벌은 경감이 아니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북한에도 보안법이 무색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법제와 제도가 있는 만큼 국보법의 명칭과 뼈대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기자

## 2여, 보안법 개정 합의못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일 양당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해 양당 8인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회의는 현행 국가보안법 중 천양고무죄 대폭개정, 불교지죄 폐지, 반국가단체 개념 수정 등을 주장했으나 자민련은 개정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중 보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 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국민회의가 최근 국가보안법상의 불교지죄(10조) 등 일부 조항을 삭제키로 한데 대해 천주교 등 각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일부 조항의 개정은 의미가 없다면서 전면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1일 천주 내력2등 주교좌성당에서 '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순회미사'를 봉헌하고, "국가보안법의 부분 개정 방침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날 천주교구에서 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한데 이어 수원교구 성남동본당(11월1일), 서울대교구 명동주교좌본당(11월8일), 마산교구(장소 미정·11월15일)에서 순회미사를 갖기로 했다. 【오세택 기자】

가톨릭  
2001/10/10

## 가톨릭만평

박성규



언제까지 이렇게...



# '보안법 철폐' 수원교구 사제연대 결성

## 대회년 맞아 사회정의운동에 투신...양심수 석방도 촉구

수원교구 사제들은 5월 성남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연대(대표 방상복 신부)를 결성하고 국가보안법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관철해 온 사회정의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제연대는 이날 5월간의 시국미사를 마치며 발표한 '같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반민중적, 반민주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외로운 노동자와 학생, 청년, 교수들을 처다않 감옥으로 내몰았던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무관심했던 사제로서 부끄럽다"고 반성하고 "외계와 세신법이 대회년에 여정에 동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원교구 사제들이 대사의 문제에 관동의 목소리를 낸 것은 드문 일로

대회년을 맞는 교구 사제들이 앞으로 사회정의 운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성명서는 "사회정의와 자유, 평화"를 외치며 실현을 거부하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야말로 애당초 구원의 축제인 대회년의 정통신앙이 땅에 뿌리내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전면 철폐를 주장했다.

사제연대는 성명서에서 "이미 남북의 우애가 드러난 아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며자나 비리사아과 사할보다 '더 좋게' 살지 않으면 안된다"며 북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양심수 전원 석방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에 지도층과 위정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수원교구 사제들은 지난 10월 중순 가을 사제연수에서 대회년을 맞는 사제로서 사회정의에 무관심해온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발인 뒤 사제연대를 추진해 왔다.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교구장 최희기 주교와 70명의 교구 사제가 서명했다.

대회년 주교와 교구사제 45명이 사후 정가·시신을 기증기로 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교구 사제들이 대규모로 정가·시신기증을 신청한 것은 드문 일로 타 교구 사제들에게도 과감한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교구 관내에 세발 새살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정가·시신기증 운동에도 추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교구 사제 50명이 또다시 함께 변에 정가·시신기증을 신청했다.

교구는 지난 10월 중순 가을 사제연수에서 사제 50명의 정가·시신기증 신청을 받아 지난 2일 서울 관내 양민동본당에서 접수했다. 이번 정가기증 신청자 가운데 시신까지 기증한 사제는 7명이다.

수원교구 사제들은 지난해 봄 사제연수에서도 대회년을 앞두고 사제들이 나눔실선에 앞장서기 위해 교구장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보안법 철폐' 범국민운동으로

## 120개단체 '연대회의' 발족...인천교구사제단도 단식기도 돌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 1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경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발족식을 열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발족식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자신의 부정부패, 기득권, 권력을 저수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 권력에 안락하지 못하도

록 부정에 나섰다"며 "그동안 우리가 용이해 왔던 국보법 폐지 운동에 여당을 하나로 모아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대회의를 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범국민연대회의는 다음달 2일 서울 대교로 등 건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1차 범국민연대회의를 열고, 10월과 30일 각각 2·3차 범국민연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인천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단 30여

명은 이날 인천시 중구 남동 카페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단식기도에 참여했다.

김영익 신부(인천교구 한소구역)는 사제들은 "국보법은 그동안 해왔던 순박한 세상을 돌아보고 권력에 거부감 없이 임할"이라며 "이 법은 권력을 중심으로 규율해 미흡한 용오를 조장하고 부도·형제를 길러놓아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현행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일관된 개혁을 가져와야 하고 추진된다. 민중·사회정의, 개혁"이라



'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주최측이 서울 경동성당 발족식에서 발간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제목의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 반민주악법 철폐 결의 '범국민 연대행동' 집회

유가협, 민주노총, 참여연대, 국가보안법폐지 범국민연대회의 등 6개 연대회의로 구성된 범국민 연대행동이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본격활동에 나섰다.

▶ 관련기사 6면

범국민 연대행동은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은 민주개혁법안의 제·개정과 반민주악법 철폐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외면한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16대 총선거에서 후보자 검증, 낙선 운동 등을 통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개혁관계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농업개혁 관련법 제정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보상과 의문사 진상규명법 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박정희 기념관국고지원 반대 △부패방지법 제정 △4·3특별법 제정 △통합의료보험법 제정 및 약사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11가지 결의를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참가자들이 2일 대학로에서 '국가보안법'이라고 쓴 '칼'을 쓰고 있는 죄수를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백영민]

# 보안법 철폐 범국민 행동의 날 행사 범국민연대회의, 16·30일에 2·3차 행사 전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등 120여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지난달 28일 서울대교구 명동성당에서 각계 원로 및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가칭)를 결성한다. 이어 2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제1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가졌다.

만민선언 △범국민 서명운동과 공동청원 등 정치권 압박을 통한 공동투쟁 △토론회 및 강연회 조직 △인터넷 사이트 개설 및 국제연대 활동 △국가보안법 폐해 배서 제작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사발 단식농성 투쟁 확산 등의 활동을 전개기로 했다.

[오세혁 기자]

자유와 광명이 넘쳐 흐르는 통일된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를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 문정현·전종훈 신부 등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서울 대학로에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가진



"보안법은 가리"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국가보안법 허수아비를 처형하고 있다.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1999년 활동보고서



# 찬양고무죄 폐지될까

유엔서 권고- 이른 시일내 손질 불가피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권고한 국가보안법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 시효기간으로 남남의 여지가 없어졌다며 국내외의 폐지압박을 피해왔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는 이날 남북 대치라는 한국 의 특수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지적, 정부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권고도 공식적으로 지난 1998년 6월 24일 인권이사회에 대한 권고의 결의안에서 최근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이사회가 특히 문제삼은 것은 제7조 찬양·고무죄, 이 조항에 대한 조속히 조속히(urgently) 개정하라고 압도적 다수결로 권고했다. 제7조 찬양·고무죄가 지나치게 넓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이사회는 "의사표현이 무한히 아첨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그 단체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한 것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것은 '사면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

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90% 이상이 제7조 위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제7조 위반은 '제7조 폐지-국보법 폐지'로 간주하고 이 조항을 없애기 위해 전례부각하고 있다. 국면회의도 상당 부분 이같은 입장을 통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정책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7조를 폐지할 경우 국가보안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엔 일부 진보·보수 단체의 반대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권이사회가 결연으로 문제삼고 다른 어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제7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사회의 권고사항은 강제력이 없지만, 의무를 부과할 정부로서는 유엔의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사회가 "언론사외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사면의 인정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부는 장경선전담 요구를 반영했다. 지난 8월 장가수 56명 중 40명이 헌법재판소를 제소할 방침이다. 장경선 전담 '지적사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unnykim@joongang.co.kr>

# 국가보안법 단계적 폐지 유엔서 권고

한국 인권상황 심사

유엔 인권이사회는 5일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91~95년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이사회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합리하게 광범위하며, 이같은 제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기사 3면>

이사회는 또 사상전향제도 대신에 도입된 준법사약제도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한해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석방의 전제조건이 되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사회는 특히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감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호주제도 유지와 태아 성감별 관행이 성비(性比)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강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 '부부간 강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판사 책임명제도가 사법부 독립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법무부는 "국가보안법은 현재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며, 그 밖의 지적·권고사항은 국민의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삼우 기자

<sunnykim@joongang.co.kr>

# 보안법 개정 '흐릿'

자민련 "총선 앞두고 왜 건드리나"

이번 회기서 "물리적으로 어려워"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가보안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국면회의와 자민련은 지난 8일 양당 정책위의회에서 양당 8인소위를 구성해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위를 한번도 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첫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1주일에 남지 않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처리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이다.

양당은 여초 8일 양당 정책위의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최종조율을 하기로 했으나, 결국 서로의 견해차이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공을 8인 소위로 넘긴 바 있다. 국면회의는 불교지적 폐지, 찬양고무죄 폐지, 반국가단체 개념 수정 등을

주장한 반면 자민련은 개정 필요성은 동의하나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일정정 국면회의 정책위의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양당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일단 소위에서 최대한 양측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합의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현행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회의로서는 자민련과 합의 없는 법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개정에 대한 반대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일 김대중 대통령이 여당 정책위의장, 총무단 등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강경법 총리도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생각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국가보안법 개

정을 다시 한번 지시했지만 변화가 없다. 자민련 안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제51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행사의 하나로 국가보안법에 관한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엔 유재간 국면회의 부총리와 백승현 변호사 등이 참석해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에서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던 경찰청 정책위의장과 양동만 정신문화연구원 교수는 막연에 세미나 참석을 거부해 나오지 않았다. 인선희 기자 shunhxi@co.kr

# 아직도 국가보안법 '찬양'인가

여단인 국면회의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한다. 개정안의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특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찬양·고무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불교지적의 이력 표현을 제하·반노·인권의도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반국가단체 조항도 정부를 찬양하는 행위"를 없애고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만 규정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인권의 개선과 남북간의 화해·협력 차원에서 볼 때 그동안 논의돼 온 내용에 비해 나아간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제7조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 침해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보안법 개정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의 보안법 개정 내용이 불허하자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어찌 성명을 통해 "보안법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나라의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안법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찬양·고무죄 조항을 개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거듭되는 말이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시대의 흐름이 역행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란 존재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안국주권적으로 지목돼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들고 있는데, 이 조항은 헌법 전문을 비롯해 제4조와 68조 등의 평화통일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구나 7·4 공동성명 이후 이 조항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50년대의 '무력통일론'이 아니다. 그런 주장은 법 논리보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최근 법무부 국감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보안법 위반 구속사건의 심형 선고율은 8%밖에 되지 않는다. 공안 당국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 진행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보안법 사범을 제외한 관련자들에게 상급을 주도한 보안법 제2조가 이런 무리한 관행을 부추겼을 것이라는 의견이 든다. 과거 민주화 운동용 탄압에는 보안법을 안보의 보루처럼 내세우는 것도 받아들여야 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보호 대상은 민주주의와 인권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면회의와 이번 개정안이 국회 회의과정에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안법 폐지' 시국미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법국민연대의 회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미사'를 열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흥근 기자 root2@hani.co.kr



# 한나라 색깔시비 보안법으로

재벌개혁 반대 명분약화... '개정발상 위험'

## 여 "시대착오적 매카시즘"

김대중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둘러싼 여야의 '색깔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뾰족한 반대 명분이 없는 재벌개혁 대신 국가보안법 문제로 논쟁의 초점을 옮기려는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19일 이회창 총재 주재로 당 안보관련 의원회의를 열어 "정부의 보안법 개정 추진은 인권보호가 아니라 북한에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선 "대북정책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중국에는 보안법 폐지의 전단계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보안법 개정은 북한 형벌의 개폐와 직화통일 포기 등의 문제와 연계해 상호주의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사회 대변인도 주요당직자회의 뒤 "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나 찬양고무죄가 구성요건이 모호하다는 점에 대해선 우리 당도 는

의할 생각이 있다"며 "그러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한다면, 간첩을 신고할 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매카시즘적이고 시대착오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유선호 인권위원장은 "북으로 이르기 저으리다"며 "비어

## 보안법 부분개정 아닌 폐지 운동을

'보안법 독소조항 반드시 퇴출'이란 기사(21일치 15면)를 보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항의 국보법 철폐 운동을 접할 수 있었다. 많은 사회·시민 단체들이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며 힘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단지 7조만의 모호성이 인정된다고 하기보다는 그 모호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전체적 자의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개정에 대한 운동인지, 폐지에 대한 문제인지 명확한 태도가 나와야 할 것이며, 개정이라면 모든 조항에 대한 전체적 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 또 <한겨레>의 1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로 화두가 됐던 국보법 철폐 문제가 너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다. <한겨레>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나 어떤 단체의 의견 소개가 아닌 보안법 폐지 주체로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획기사나 그밖의 자세한 활동과 내용을 좀더 접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보안법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지 않을까.

권정욱/pobi21@unitel.co.kr

## 유엔 인권이사회 '보안법 단계적 폐지' 권고 천주교 연대 '긍정적' 평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함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등 천주교계에서는 일단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속히 보안법을 폐지해 줄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67차 회의에서 한 국정부의 2차 인권보고서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정부에 공식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또 심사결과 발표문에서 "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한 것은 환영하지만, 대체된 '준법서약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석방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같은 권고는 그간 한국의 보안법 폐단을 지적해온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입증표명으로서 앞으로 보안법 개폐 논란에 지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천주교 연대 상임대표 김영진(원주교구 정명위 위원장)신부는 8일 "유엔 인권위의 요구는 종래 우리가 주장했던 것으로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유엔이 좀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또 "하루빨리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 한 사람의 인권도 탄압받지 않도록 인권존중 차원에서 보안법 폐지쪽으로 분명한 입증표명을 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연대를 통해 유엔 인권위측에 서한을 전달하는 등 직접적인 채널을 만들어 우리의 확고한 폐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택 기자]

# 보안법 불고지죄 없애기로

## 국민회의 인권위 개편안 반국가단체 개념완화

국민회의 인권위(위원장 유선호)가 29일 반국가단체 개념을 수정하고 불고지죄 폐지하며 일부-정당의 직을 대상으로 허탈을 축소·타당 조정하는 방향의 보안법 개편안을 마련, 공개했다.

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안법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인권위의 개편안도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위원회의와 공식적인 당면 협의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위원이 발표한 인권위의 개편안도 정부를 정형화 시켜 국가보안법 불고지죄 또는 집단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정부를 침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위원은 "앞으로 남북교류가 진척되고 평화공존이 정착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원안은 또 현행 불고지죄를 폐지하고 고부·친왕(친왕)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고부·친왕·친왕위를 폐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령을 반사선 선동 행위를 폐지, 고지 단순한 고부·친왕



최영익 인권위원

## 우리 주장

###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불법고인 불합법 원칙을 지키고 오늘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가져올 정부인 국가보안법

한 비상대책위를 설치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갈 것이며 시민단체들과도 연대할 것이다. (29일자 성명서)

### 공단내부 투기 의혹 밝혀야

불법고인 불합법 원칙을 지키고 오늘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가져올 정부인 국가보안법

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안법개정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인권위의 개편안도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조만간 위원회의와 공식적인 당면 협의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적인 처리는 물론 해당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정교회연대국  
사제단 삭발단식기도 23일째 지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성전에  
저희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배해제·양군으로 조계사 농성단 일동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단식기도 8일째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부천지역 100인 선언

우리는 이 땅 민주주의를 짓고 통일을 기원하며 노동자·민중의 정치·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해 전국 모든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노동계·이재은 박복을 조승자 이은영 박양희 박용래 박춘화 유홍 김영태 박재현 권오광 손무수 윤일호 강진문 김한철 권민주 김동영 이미숙 이근선 최은민 김성수 임승록 오서원 박종인 김영산 이원근 김병훈 박태연 김진규 조대원 허현모 고태훈 이성기 강두희 시민사회단체·박선기 신철영 이태일 이재홍 이호수 김영철 김순택 김성호 이역재 이홍식 박정현 박성배 이만주 신원균 김동혁 김상길 이태병 김아현 이희선 양시모 오경혜 김관식 김범용 원범재 김동선 신종철 이계환 홍인석 마승철 손인석 이화자·학생·오병훈 서동훈 법조계·김경훈 이상원 권규대·종교계·김준식 박종환 조명연 이광권 방호일 이민주 황상근 김근자 김정미 최임심 이택규 박현식 이원준 김명중·교수·김종배 조돈문 박광명 오명섭 유승원 이두범 이순근 이영희 전종일 정연태 안병욱·의료계·손인환 박재찬 하홍식 윤선희 이규화

일련 :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부천지역 공동대책위 발족식  
이 1999년 9월 29일 오후 6시 30분, 부천 원미동 성당에서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 활보

특·별·호

1999년 10월 9일

발행처: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연락처: 인권운동사랑방  
전화: 02-1-0000  
팩스: 02-1-000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 국가보안법이야기 ①

### 언제나 가까이

박 시백



## 국가보안법이야기 ②

### 대통령과 나

박 시백





국보법 이야기 ③

기준

박시백



국보법 이야기 ④

최후여감

박시백



	베지	개정완화	현행유지	강화	기타/알모름
일반국민	7.7	70.5	11.6	7.3	2.9
변호사	27.5	65.4	4.6	0.7	2.0
교수	29.0	70.0			1.0

\*한겨레신문사 여론조사팀, 1998년 11월 22일

통계에서 보듯 국민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국가보안법 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를 전면 삭제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천주교 연대 참가단체 주소록♥

사무국 : 02-747-2448 전송 02-747-2447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서관 2층

단체명	연락처	집행 책임자	주소	대표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TEL 062)227-6008 FAX 062)225-1306 천리안 KJJPC	전경진 사무국장	501-023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3-5 가톨릭센터 6층	이준형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TEL 032)765-6970 FAX 032)765-9972 천리안 JPC032	곽한량 총무	400-090 인천시 중구 답동 3 가톨릭회관 103호	박병훈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TEL 051)515-3969 FAX 051) 천리안 PSJPC	조삼호 사무국장	614-031 부산시 금정구 부곡3동 200-63 가톨릭사회복지관	이성균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TEL(FAX겸용) 0431)215-0324 천리안 PAJCH	이은규 사무국장	609-32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주교좌상당 내 사도회관2층	곽동철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TEL 0371)764-3220 FAX 0371)766-3004 천리안 WJJP	윤요형 사무국장	220-070 강원도 원주시 인동 242-16 가톨릭센터	김영진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TEL 0551)282-3737 천리안 CSEH	이성희 형제님	641-060 경남 창원시 신월동 13-67 가톨릭사회교육회관	유영봉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TEL 0571)859-4213 천리안 CPIO	최승근 신부님	760-300 경북 안동시 송현동 337 송현동 성당	최승근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TEL 064)751-0147 FAX 064)756-5531	고병수 신부님	690-031 제주도 제주시 삼도1동 108	양영수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TEL(FAX겸용) 02)747-2447 천리안 YJS64	이성수 간사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문국주, 김원호, 신대운, 여이기
천주교 인권위원회	TEL 02)777-0643 FAX 02)775-6267 천리안 CHRC 나우누리 인권위	김인자 사무국장	100-020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층	김형태
우리신학연구소	TEL 02)3141-8457 FAX 02)3141-8459 천.하 WOORITH	경동현 연구원	121-22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0-8 합정빌딩 4층	김항섭
가톨릭노동사목 전국협의회	TEL 02)2279-2302 FAX 02)2269-1567 천리안 CLAC	이미희 간사	11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7-3호	오두희
전국가톨릭 청년단체협의회 (광주, 부산)	TEL (FAX겸용) 062)227-7125 천리안 GACINA	전정자 간사	501-023 광주시 동구 금남로3가 3-5 가톨릭센터 지하 청년연합회	문형두

전국가톨릭 대학생협의회 (서울,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부산, 마산, 안동, 제주, 수원, 원주, 춘천교구 대학생연합회)	TEL0431)215-6335 나우누리 오리전사 나우누리 히느리지	황정유 의장	609-323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 내덕2동 주교좌상당 대학생연합회	황정유
인천교구가톨릭 청년연대	TEL 032)761-0478 천리안 ODILIA	김상용 회장	400-090 인천시 중구 답동3번지 가톨릭회관 103호	김상용
인천교구가톨릭 환경연대	TEL 032)887-0390 FAX 032)887-0391 천리안 ABANADA	황선용 사무국장	400-120 인천시 중구 유동 2-5번지 보배학원 3층	김종운
(사)푸른평화	TEL 053)254-1136 FAX 053)252-7860 유니텔 HKCH254	박성태 형제님	705-600 대구광역시 남대구우체국 사서함 9호	정홍규
전국환경 사제모임	TEL 053)256-1300 FAX 053)256-9559 천리안 PEACE26	석창훈 형제님	700-443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사목담당	정홍규
광주대교구 환경사제모임	TEL 062)227-6008 FAX 062)225-1306	김강재 간사	501-023 광주시 동구 금남로 3가 3-5 가톨릭센터 6층	김계홍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TEL 02)3672-0251 FAX 02)3672-0255 천리안 CPAJ	지현만 사무국장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4 광장빌딩 5층	문규현
한국가톨릭농민회 ·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전국본부 (서울, 수원, 인천, 광주, 청주, 전주, 부산, 마산, 대구, 원주, 안동, 대전)	TEL 02)3141-5004 FAX 02)335-0807 천리안 KCFM9697	백승희 이사벨라	121-240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2-36 2층	최민석, 이진선
천주교정의구현 목포연합	TEL 0631)242-4785 천리안 SIMINPCS	박갑수 사무국장	전남 목포시 북교동46 천주교북교동교회 내	신대운
천주교정의구현 상주연합	TEL 0582)535-8686	여이기 대표님	경북 상주시 남성동 13-8번지 현대회관	여이기
빛두레 신앙인학교	TEL 02)747-2445 FAX 02)747-2447 천리안 YJS64	주소정 간사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김원호
장기수가족후원회	TEL 02)747-2443 FAX 02)747-2447 나우누리 장기수	이현정 간사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노진민
천주교청년공동체	FAX 02)747-2447 천리안 YJS64	최수진 간사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최현희



천주교여성공통체	TEL 02)747-2442 FAX 02)747-2447 나우누리 천여공	임현주 간사	110-510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50-17 천정연 회관 2층	김선실
광주대교구 노동사목	TEL 062)224-4139 FAX 062)224-4141 천리안	박비오 신부	501-023 광주시 동구 금남로3가 3-5 가톨릭센터 6층	박비오
부산교구 노동상담소	TEL 051)293-6403 FAX 051)293-6404	박주미 간사	604-031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259-1 3통 5반 3층	조옥중
부산교구 공부방연합회	TEL 051)865-0956 FAX 051)861-1045	조성제 신부	611-082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산183번지 43통 2반 물만골 공부방	조성제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	TEL 0652)276-1253 FAX 0652)276-1611 천리안 나우누리 ONESPARK	전준형 사무국장	561-162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1034-1 숲정이 성지 사화관	김진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 사목위원회	TEL 02)776-7208 FAX 02)319-4428		100-022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3층	이영우
서울대교구한마음한 몸운동본부	TEL 02)774-3488 FAX 02)776-7879		100-022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4층	김홍진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TEL 02)757-8941 FAX 02)775-7539	안토니아 수녀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 17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내	이원영